"버스 타기 어려운 학생들, '100원 행복택시' 탄다"

7개 학교 학생 94명 대상… 등하굣길 확대 지원

유두석 장성군수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앞장"

장성군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100원 행복택시'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성군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100원 행복택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정류장이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3만2000명이 이용했을 정도로 이용률이 높다.

올해부터는 7개 학교 94명의 초·중학생 통학도 지원하고 있다.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지연되어 지난 5월부터 시작했다. 학교별 수업 일수만큼 등하교 택시 요금이 지원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100원 행복택시의 초·중학생 이용 확대가 원거리 통학 학생의 불편 해소는 물론, 택시 이용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00원 행복택시 확대 지원은 장성교육청의 에듀택시 사업과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에듀택시는 통학 거리가 멀어 불편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통학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성=박종영 기자

'장애인 코로나19 대비' 복지부,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장애인 겪는 특수성 장애유형별 제시

보건복지부가 24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속히 시행했던 장애인 지원 대책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려 사항을 반영하고,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해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번 매뉴얼은 장애인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가 갖는 특수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매뉴얼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 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활동으로 인한 취약성 등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특수성을 장애유형별로 제시해,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의 출발점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정보 접근성 제고 △이동서비스 지원 △감염예방 및 필수 의료지원 △돌봄 공백 방지 △장애인시설 서비스 운영 등 5가지 영역으로 세부 고려사항과 사례를 제시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 대응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장애인 고려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건강검진 치매검사결과 제공

권익위, 복지부에 치매안심센터 미비점 개선 권고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때 실시하는 인지기능장애검사(KDSQ) 결과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 제공돼 초기치매 환자에 대한 교육·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5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민원분석,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의 미비점을 발굴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장기요양치매등급자 정보와 만 66세 이상 국민이 건강검진 시 받는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가 건강보험공단과 암센터에는 통보되지만 치매안심센터에는 제공되지 않고 있어 치매진단 유사사업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초로기 치매' 환자가 전체 치매 환자의 6~9%를 차지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6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60세 미만의 취약계층 초로기 치매 환자에 대한 조기 검진사업을 추진하는 등 치매관리대상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한 농어촌지역 치매 환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을 활용해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운영하도록 했고, 농어촌 치매안심센터 이용 대기자가 없거나 정원 여유가 있을 때는 연장심사를 거쳐 1년이 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뉴스1